

방 산 안 보

서정순

순서

- 방산산업기술 목록 및 방산업체 현황
- 방산안보 관련 기관
- 방산안보 관련 법령
- 방산안보 환경
- 방산안보 발전 방안

개 요

-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괄목할 발전과 수출 증대
- 적성국 및 경쟁국에 의한 기술절취 시도 증가 예상
- 국가 차원에 입체적인 방산안보 시스템 요구

방위산업기술 목록

분 야	분 류
8대분야(45개분류)	45개 분류(123개 기술)
센서(24개)	레이더센서(5), SAR(4), EO/IR 센서(3), 소나센서(6), 레이저센서, 항법센서(2), 특수센서(3)
정보통신(34개)	전장상황인식(4), 상호운용성(3), 국방S/W(3), 통신전송(4), 통신교환, 통신단말(3), 네트워크구성/관리(2), 사이버전(4), 전자전(4), 국방M/S(6)
전자제어(13개)	무인자율(3), 유도조종(2), 사격제어(3), 구동(2), 특수제어/전자(3),
탄약·에너지(17개)	탄주(4), 신관(2), 추진체(3), 지향성에너지(4), 비살상무력화(2), 전원/전력발생/공급(2개)
추진(10개)	공기흡입추진(3개), 로켓추진(2개), 전기추진(3개), 특수추진(2개)
화생방(10개)	화생방탐지/식별/경보(3개), 제독, 해독(2개), 화생방보호(2개), 연/차폐, 화생방검증/폐기
소재(4개)	내열/단열재료(2개), 장갑/대장갑재료, 특수재료
플랫폼/구조(11개)	생존성/스텔스(4개), 탑재 구조체(2개), 해양체 구조(2개), 비행체 구조(3개)

방산업체 현황

구분	주요 방산업체	일반 방산업체
계	65개	20개
분야별 업체(숫자)	화력(9), 탄약(8), 기동(12), 항공유도(11), 함정(7), 통신전자(10), 화생방(3), 기타(6)	화력(1), 탄약(2), 기동(2), 항공유도(5), 함정(1), 통신전자(6), 화생방(0), 기타(3)

방산 안보 관련 기관

■ 방첩기관 :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첩업무규정 제2조 3호

■ 정보수사기관 :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 ② 항

방첩기관의 임무

- 외국 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 작성 및 배포
- 외국 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 · 견제 및 차단
- 외국 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국정원)
- 방첩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 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제공
- 위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방첩업무규정 제2조 3호

국가정보원

■ 임무

● 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임무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국제,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 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관련 우주 정보

국제,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 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관련 우주 정보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국가정보원

■ 임무

-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
-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국가정보원

■ 신·구 국가정보원법 비교

구법	신법(2024. 1. 1 시행)	비고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제3조(직무)①항)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제4조(직무) ①)	국내 보안정보 수집임무 삭제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조①항)	3조①항 3호, 4호 삭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모든 수사권 폐지

국군방첩사령부

■ 임무

- 군 보안업무
- 군 관련 방첩업무
- 방위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처리
- 방위사업체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직무)

국방정보본부

■ 임무

- 국방정보 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업무
-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 국방보안업무 훈령 및 방산보안업무훈령 제정 및 관리
-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의2(업무)

경찰청

■ 임무

- **간첩 · 테러 · 경제안보 · 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첩보에 대한 분석 · 지원 및 수사(경찰청 안보수사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9조(안보수사국)

-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경제범죄 수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6조(수사국)

방위사업청

■ 임무

- **간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공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 및 조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 **방산업체 및 통신시설/수단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방산물자/원자재에 대한 보호대책**

방위사업법시행령 제44조(보안 요건 및 측정)

- **방위산업기술보호 점검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금지 관련 법령

■ 방산기술보호법

•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취득, 사용 또는 공개 행위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방위산업기술 유출 금지 관련 법령

■ 방산기술보호법

-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
2.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방위산업기술 유출 금지 관련 법령

■ 방산기술보호법

● 제21조(벌칙)

-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0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①~③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⑥ 제①항 및 제②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방산안보 환경

■ 무기의 다양성에 따른 협력업체(기관) 및 참여인원 증가

-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른 부품별 분업화, 전문화 추세
- 참여 업체 및 관련 인력의 증가
- 국가 주도 → 산 · 학 · 연 협동 강화
- 수출 확대에 따른 기술 이전 증가

※ 방산 안보 대상 인원 및 업체 증가

방산안보 환경

■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 방법의 진화

- 핵심기술 절취 및 탈취
- 연구인력 납치, 매수 등
- 사이버 공간을 통한 해킹 및 해킹 방법 진화

2020~2022 대기업 방산업체 해킹시도 : 121만건

웹해킹 시도(27만), 악성코드 감염 의심 트래픽(39만),

정보수집 시도(54만)

방산안보 환경

■ 방산안보 인력 부족

- 방산업체 및 관련 인력 증가 대비 방산안보인력 정체, 혹은 축소
- 국정원 정보인력 및 안보수사인력의 전문성 사장 위기

방산안보 발전방안

■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대비 철저

● 안보범죄 정보업무 규정 조기 정착

국정원이 안보범죄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수행하고, 다른 협력기관과 정보를 공유, 공조체제 구축(안 제3조)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업무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직원 파견·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안 제5조)

필요시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안보공백 우려에도 대응(안 제8조)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국정원 직원과 유관기관 파견 직원이 함께 활동하고, 전산공유체계 구축(안 제6조)

방산안보 발전방안

■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방산안보 체계 보완

- 연구소나 업체의 규모, 예산투입, CEO의 관심도에 따라 방산안보 수준 천차만별
- 업체별 규모에 따라 방산보안 인력 기준 마련 및 전문화
- 방첩기관과 협조 가능한 업체의 방첩업무 개발

방산안보 발전방안

■ 방산안보 기관 간의 협력 강화

- 국정원 방첩업무규정 제4조(기관간 협조)의 ‘방첩기관의 장’ 을 ‘방첩기관 등의 장’ 으로 수정
- 방사청 방첩업무규정의 ‘방첩’ 개념 수정 및 방첩담당관 임무 명시
- 민간업체와 방첩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결론

-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경쟁국에 의한 기술 탈취 시도 가능성 증가를 의미
- 방산업체의 증가와 전문화로 인한 방산안보 소요 증가
-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임무 해제로 인한 방산안보 공백 발생 우려
- 방산안보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기술적 개선
- 방산안보기관과 방산업체간 안보협력 강화 중요성 증대

대한민국 방산 세계 4강 만들기

이정훈 명지대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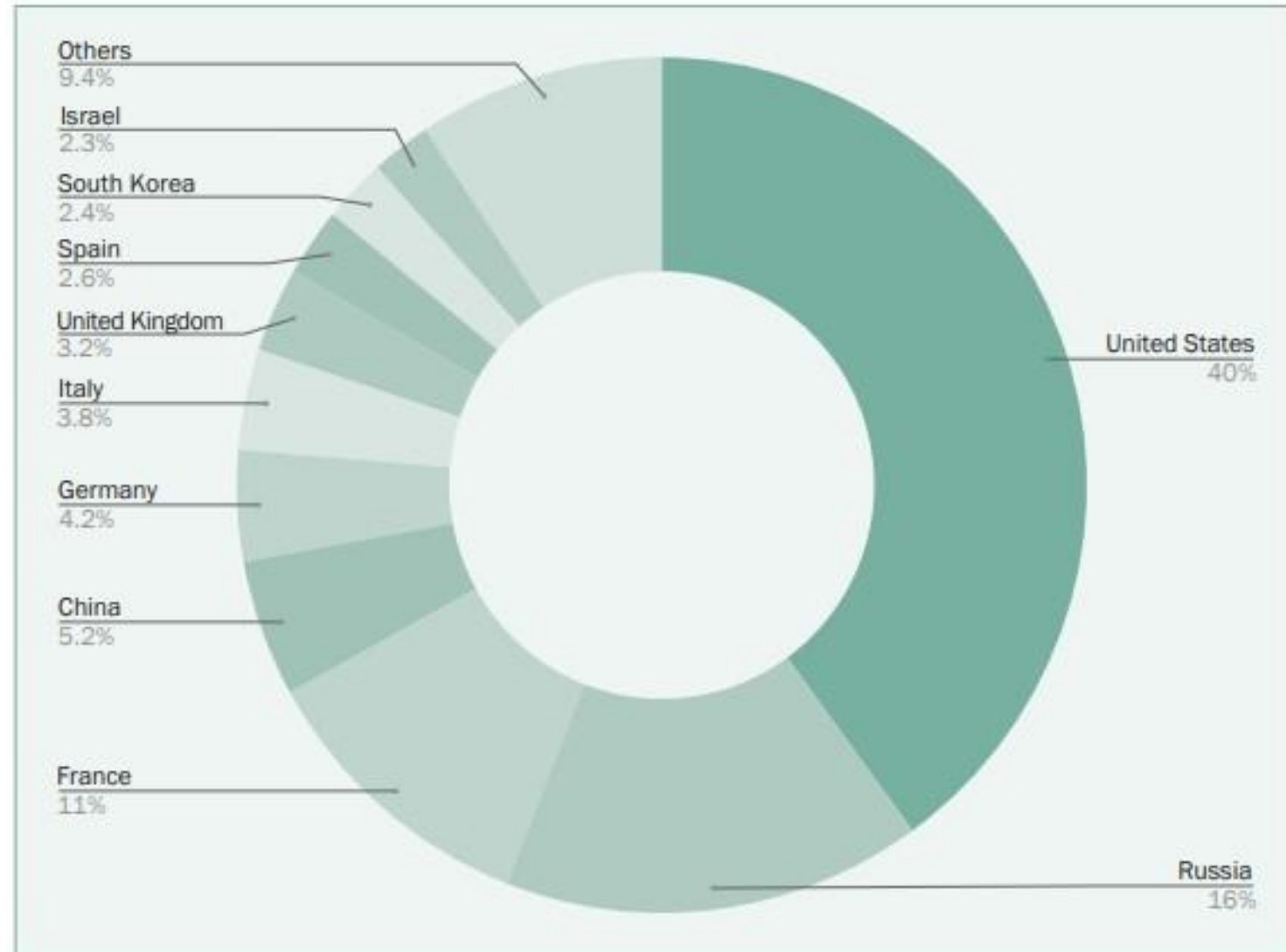
2018~2022년간 세계 무기 거래 동향

2013~2017년간과 대비한
SIPRI 보고서 토대

10대 무기 수출국 동향

압도적인 미국의 무기수출(2/5)

- 40% 차지(33%에서 7% 포인트 증가)
- 2위 러시아(16%)+3위 프랑스(11%)+4위 중국(5.2%)+ 5위 독일(4.2%)+6위 이탈리아(3.8%)을 **더한 것(40.2%)과 비슷**
- 103개국에 수출, 그런데 세 지역 집중
 - 중동: 41%**(49%에서 감소)
 - 아시아 오세아니아(아태): 32%**
(33%에서 조금 감소)
 - 유럽: 23%**(11%에서 급증)
- 세 지역에 무려 96%를 수출
- 아프리카, 남미는 비중이 작다.



중동의 反이란 親美 국가와 아태와 유럽의 동맹국이 미국의 주시장

-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19%), 카타르(6.7%), 쿠웨이트(4.8%), UAE(4.4%)—이란을 견제하는 나라들
- 아태의 일본(8.6%), 호주(8.4%), 한국(6.5%)—미국의 동맹국
(대만은 19위에 그쳤지만, 2013~17년간에는 4위의 수입국이었다)
- 유럽의 영국(4.6%), 네덜란드(4.4%), 노르웨이(4.2%)— NATO 회원국
- 미국 무기 수입은 사우디 아라비아(19%), 일본(8.6%), 호주(8.4%), 카타르(6.7%), 한국(6.5%, 5위), 쿠웨이트(4.8%), 영국(4.6%), 네덜란드(4.4%), UAE(4.4%), 노르웨이(4.2%) 순. 대만은 19위
- 이 열 나라가 10대 미국산 무기 수입국이었다
- 중동과 아태, 유럽은 안보수요가 많다/ 미국에 안보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 NATO 표준이 통하는 곳(미국 무기와 바로 호환할 수 있다)
-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구식 무기를 제공받았기에 미국의 주요 무기 거래국이 되기엔 미약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급감한 러시아의 무기 수출, 전후에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

- 러시아. 47개국에 무기 수출. 세계 시장 16% 차지. 그런데 2018~22년의 수출 규모는 2013~17년 대비 31% 감소
- 2019년까지는 안정적 추세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0년부터 급감. 침공을 한 2022년은 더욱 낮아졌다.
- 미국의 동맹이 아닌 아태 지역(65 %)이 가장 큰 시장. 다음이 반미적인 중동(17 %), 아프리카(12 %) 순==합계 94%
- 아태 지역에서는 인도 (31 %)와 중국 (23 %)에 집중. 두 나라 수출액만 54%. 그리고 이집트가 9.3 %.
- 인도는 러시아 무기 도입을 크게 줄이고 있다. 2013~2017년 대비 2018~22년간 인도 시장 규모는 무려 37%나 줄었다
- 반면 중국(+39%)과 이집트(+44%)에 대한 수출은 증가했으나
-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는 2021~22년간 이집트에 무기를 인도하지 않았다
- 2022년 이집트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여 러시아에 대한 전투기 주문을 취소(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는 석유는 물론이고 무기도 제대로 무기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 10대 러시아 무기 도입국의 러시아 무기 도입 규모는 2013~17년 대비 59% 감소. 러-우전쟁 이후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 러시아 주요 수출 무기는 전체 거래액의 40%를 차지한 전투기와 전투용 헬기였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취소하는 나라가 증가.
- 러시아도 자국군 사용을 우선시하기에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74% 증가로 top 10에 진입한 대한민국

3위 프랑스의 무기 수출: 전 세계 총량의 11%(2013~17년보다 44% 증가)/ 2022년 무기 수출액 러시아 추월
62개국에 수출했지만 금액으로 보면 아태(44%)와 중동(34%)에 집중
인도(30%), 카타르, 이집트가 3대 수입국(프랑스 무기 수출액의 55% 차지)

2022년 인도네시아와 라팔 전투기 42대(47억 달러) 계약 체결---공동 개발 중인 한국 KF-21에 적신호

4위 중국, 세계 무기 수출의 5.2% 차지/그런데 2013~17년 대비 23% 감소

46개 나라에 수출했지만 아태 지역(80%), 그 중에서도 **파키스탄(54%)에 집중돼 있다**

- 5위는 4.2% 차지한 독일. 2013~17년에 대비 35% 낮아졌다.

중동 지역(36 %), 아태 지역(32 %), 유럽 (20 %) 지역 국가 순으로 수출.

- 3.8%로 6위인 이탈리아, 2013~17년보다 45% 증가/무기 수출의 약 3분의 2(67%)를 중동 지역으로 보냈다.
- 7위인 영국은 2013~17 대비 37% 감소, 8위인 스페인도 4.4% 감소, 9위인 이스라엘도 15% 감소

2.4%의 대한민국 10위. 같은 기간 74% 증가/ 아태 지역 국가 수출에 치중(63%)

2022년부터 폴란드 수출이 대박. 계속 증가할 가능성 있다

10대 무기 수입국 동향

세계 7위의 무기 수입국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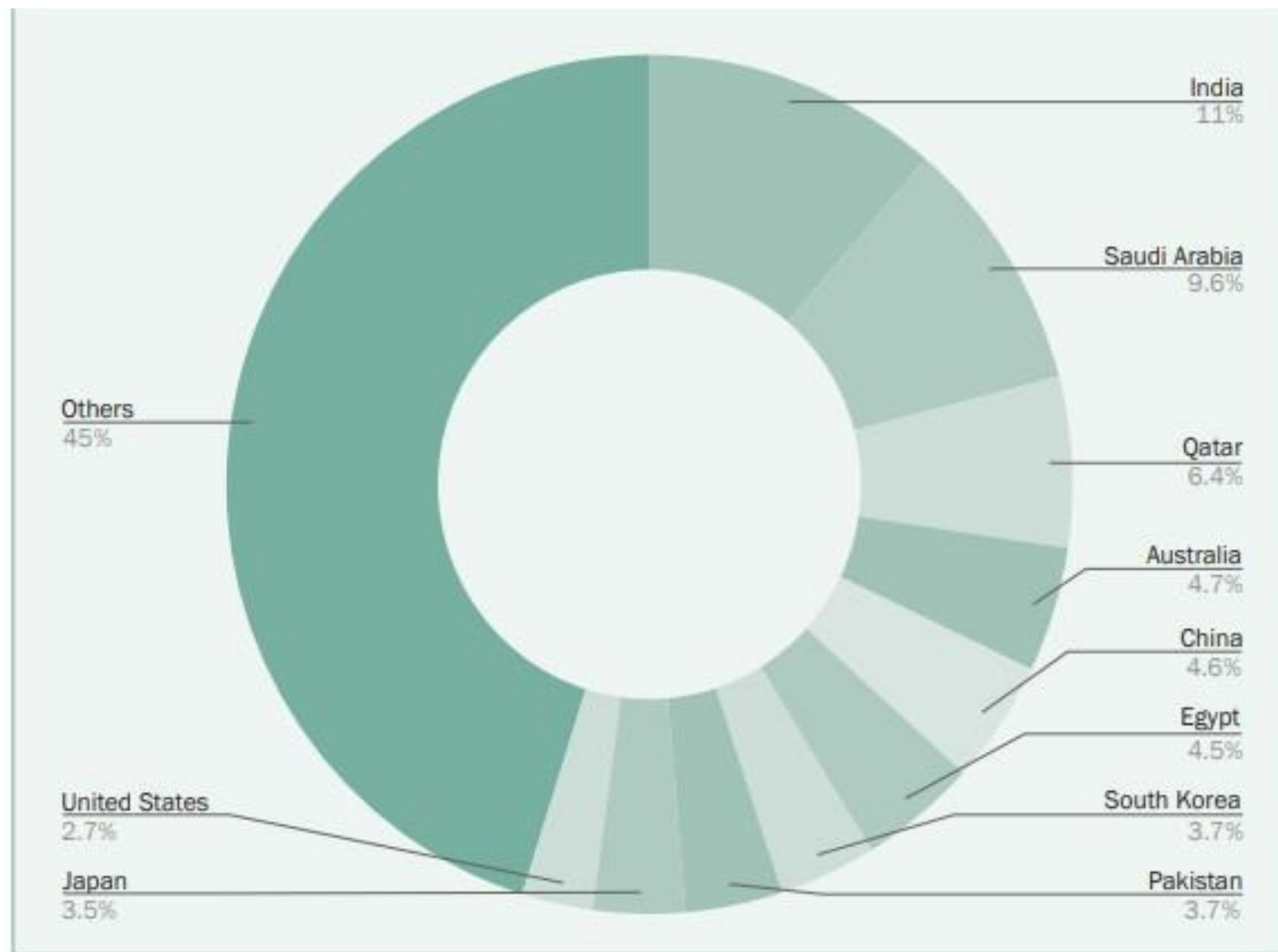
167개 나라가 무기를 수입

5대 수입국인 인도(11%), 사우디아라비아(9.6%), 카타르(6.4%), 호주(4.7%), 중국(4.6%) 이 전체 수입금액의 36% 차지

6위 이집트(4.5%), **7위 대한민국(3.7%)**, 8위 파키스탄(3.7%), 9위 일본(3.5%). 10위 미국(2.7%)

지역별 수입액은 아태(41%), 중동(31%), 유럽(16%), 미주(5.8%), 아프리카 지역(5.0%) 순.

호주와 이집트도 아시아로 보면 10대 수입국 아시아 위치



인도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의 긴장 때문에 세계 1위의 무기 수입 국가, 파키스탄은 2위

- 인도, 호주, 중국, 한국, 파키스탄, 일본의 6대 무기 수입국이 있는 아태의 무기 수입은 2013~17년 대비 7.5% 감소
- 아태 지역 상대로는 미국(31%)이 가장 많이 수출했고, 러시아(26%)와 프랑스(12%)가 뒤를 이음.
- 11%로 수입1위 기록한 인도는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긴장 때문에 무기 수입
- 1993년부터 계속 1위/ 그러나 2013~17년 대비 11% 감소/감소는 인도의 느리고 복잡한 무기 조달 과정 때문인 듯.
- 인도는 무기 공급 업체를 다변화하고, 국산 무기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수입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 인도에 대한 무기 공급 1위국은 러시아. 그러나 2013~17년 대비 러시아의 인도 무기 수출은 64%에서 45%로 하락.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제재도 러시아의 對인도 무기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 프랑스, 인도에 62 대의 라팔 전투기와 4 대의 잠수함 등 수출해 2013~17년 대비 489% 약진(미국 제치고 2위)
3.7%로 9위 기록한 파키스탄의 무기 수입은 2013~17년 대비 14% 증가.
- 중국은 2018~22년 파키스탄 무기 수입의 4분의 3(77%) 이상을 공급(인도는 러시아, 파키스탄은 중국에 의존)

中, 러시아로부터 헬기와 항공기 엔진 도입에 집중 韓日,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치중

- 동북아시아(+21%)와 오세아니아(+25%) 지역의 무기 수입은 2013~17년보다 증가/동남아시아(-42%) 지역은 감소.
- 4.6%로 세계 5위인 중국의 무기 수입은 4.1 % 증가/중국의 무기 수입은 대부분 러시아(83%)에 치중

지난 3년간(2020~22년)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한 것은 헬리콥터와 항공기용 엔진이 많았다.

(이는 중국이 헬기와 항공기 엔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 항공기 엔진 개발은 어려운 기술이다)

- 일본(+171%)과 한국(+61%)도 크게 수입을 늘렸다/양국에 대한 무기 제공은 1950년 이래 동맹인 미국이 담당
두 나라는 북한과의 긴장 때문에 수입, 일본은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미국산 첨단 무기를 수입하기도 한다.

한일은 발달된 방위산업을 갖고 있지만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등에 의한 장거리 타격 수단은 외국에 의존

미국은 2018~22년간 한국에 40대의 F-35A 전투기 인도/이 거래 대금은 그 기간 한국 무기 수입액의 43%

일본도 같은 기간 29대 F-35A 전투기 도입/이 거래 역시 같은 기간 일본 무기 수입액의 3분의 1(33%)에 달함.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계속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일본은 2022년 미국에 장거리 지상공격 미사일을 주문.

중국 의식해 F-35A 도입에 치중한 호주

-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 중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장거리 공격 능력 구축**에 치중
4.7% 세계 4위의 무기 수입국인 호주는 2018~22년간 무기 수입을 23% 늘렸다.
미국에서 F-35A 64대(최종 목표는 92대)를 도입한 것이 이 기간 호주 무기 수입액의 62% 차지.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 2018~22년간 무기 도입은 42% 감소
- 그러나 필리핀은 64% 늘렸다/싱가포르를 독일로부터 4척의 잠수함을 도입 중
- 인도네시아는 프랑스로부터 42대 라팔 전투기/한국으로부터 잠수함 3척/이탈리아와 영국으로부터 초계함 각각 6척, 2도 주문.
- 유럽의 무기 수입은 47% 증가
2018~22년 유럽 최대 무기 수입국은 영국(세계 13위) **우크라이나(세계 14위)**, 노르웨이 (15위)
유럽에 대한 무기 수출은 미국이 56% 차지/러시아는 5.8 % (주로 벨로루시)/독일은 5.1 %.

유럽 NATO 회원국의 무기 도입 한국 3위, 폴란드의 도입이 주목

- 유럽의 나토 국가들, 2018-22 년 사이 무기 수입을 65 % 늘림/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유럽 NATO 국가에 대한 무기 공급은 미국이 1위(65 %) , 2위는 프랑스(8.6%), 3위는 한국(4.9%)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기 도입 폭증한 폴란드

미국에 32대의 F-35A/패트리엇 4개 포대/394대 전차/96대 전투 헬기/12개 미사일 포대.

한국에 48대 FA-50 경전투기/1000대 K-2 전차/672대 K-9 자주포/288문의 천무(MLRS)

영국에 3척의 호위함 주문

- 독일은 미국에 F-35A 35대 주문

독일은 미국과 핵공유 협정 맺고 있어, F-35A는 내부무장창에 핵폭탄을 싣는 2중 용도기가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의 B-61 핵폭탄 등을 싣고 장거리 스텔스 침투가 가능한 F-35
도입에 치중

미국은 무슬림 국가에 스텔스기 주지 않는다

- 중동 지역은 8.8% 감소/ 그러나 10대 수입국 중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이 이곳에 있다
- 미국, 중동 지역이 수입한 무기 금액의 54% 차지. 다음이 프랑스(12%), 러시아(8.6%), 이탈리아(8.4%) 순.
- 사우디아라비아, 9.6%로 세계 2위의 수입국. 미국이 78%를 공급

F-15SA 등 91대의 전투기와 2만 발 이상의 유도폭탄(JADM), 수백 기의 대지공격 미사일 제공

- 6.4%로 3위 수입국인 카타르, 2018~22년간 무기 수입이 311% 폭증

미국이 수출 1위(42%), 프랑스가 2위(29%), 이탈리아가 3위(14%)

미국에서 **F-15QA** 36대 /프랑스에서 **라팔** 36대/ 영국에서 **타이푼** 8대(총 24대 예정) /. 이탈리아에서 3척의 초계함 도입.

- 11위 수입국인 UAE는 수입액이 38% 줄었다 - 한국에서 천궁-2 도입/ 2만 발 이상의 유도 폭탄 도입
- 쿠웨이트는 146 % 증가—미국에서 **F/A-18** 28 대, 218 대의 전차//이탈리아에서 6 대의 **타이푼** 전투기 도입.
- 이란의 무기 수입은 1993년 이래 주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2018~22년간 주요 무기 수입은 0에 가까웠다.

2022년 러시아에 **Su-24** 24 대 주문.

- 이집트는 독일로부터 잠수함 4척과 호위함 4척 중 1척을 인도받음. 추가로 프랑스에 2,3척의 호위함, 이탈리아에서 2 척의 호위함 주문
- 이스라엘은 독일에 주문한 4척의 호위함 중 2척 인수/ 2023년엔 독일에서 잠수함 1척 인수하고 3척 추가 발주/ 프랑스에 초계함 주문

튀르키예 독일에 잠수함 6척, 스페인에 상륙함 주문/러시아로부터 S-400 도입해 미국은 F-35 제공 취소

미국의 對무슬림국 무기 공급 원칙은?

- 미국은 韓日濠와 NATO 동맹국, 사실상의 동맹국인 이스라엘, 친미 중립국인 싱가포르와 스위스에만 F-35 제공
 - 이들은 對러, 對中 봉쇄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들
 - 큰 시장인데도 미국은 중동의 친미 무슬림 국가에는 스텔스기를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에만 50기(F-35I) 제공
 - 그러나 사드 같은 최첨단 방어무기는 제공(UAE 사드 도입)
 - 무슬림 국가들, 親이란-反이란으로 대립(때문에 이스라엘과의 대립을 멈췄다)
 - 이스라엘만 무슬림 국가 아니다. 反이란 무슬림 국가중 이스라엘과 수교한 나라는 소수(이집트, UAE)
 - 이스라엘 국적자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방문 이력이 있는 이의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은 이란과의 긴장이 소멸되면 反이스라엘을 분명히 할 수 있다
- 중동의 反이란 국가들이 확실한 親이스라엘이 된다면 미국은 공격용 스텔스기를 제공할 것

SIPRI 보고서로 본 세계 무기 시장과 대한민국의 고민

무기 공급의 국제정치학

- 미국은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벨라루스 등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1위 차지
- 러-우 전쟁 계기로 러시아의 무기 수출 급감(국제적인 제재와 러시아의 자국군 우선 사용 때문)
- 세계 1위의 무기 수입국은 인도. Quad 참여 후 러시아 비중이 크게 줄고 프랑스 무기 약진
- 대만을 침공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산 무기의 시장이 줄고 있다(서방의 제재 때문)
- 중국은 저가로 시장을 확대해왔었다
- F-16, FA-18, 타이푼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프랑스 라팔, 대거 수출(프랑스 약진의 비밀)
- 미국은 反이란 무슬림 국엔 스텔스기 제공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만 제공
- NATO 회원국임에도 러시아의 S-400 도입한 튀르키예 미국은 F-35 제공 거부
- 무기 제공은 동맹 다음으로 단단한 협조관계 있어야(공한 무기로 공격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 무기 수출은 가성비 만으로 되지 않는다. 국제정치에 영향을 받는다

중국과 러시아를 대신해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되려면....

- T-50 미국 수출 실패, 태국과 인도네시아만 소량 수출
- 그러나 경공격기인 FA-50은 제법 수출(폴란드 등).
- 방산 선진국은 베스트셀러인 저급(low) 전투기 F-5를 잇는 후속기를 개발하지 않았다.
- FA-50, 작전 수명이 다한 F-5 대체기로 인정받는 듯
단좌의 F-50으로 개조해 연료와 무장량 늘이면 판매 늘 듯
- KF-21은 F-16과 FA-18, 타이푼, 라팔이 있는 시장에 들어간다. 그런데 英日이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려고 한다
- 공동 사업자인 인도네시아 개발비 지연하고 라팔 도입
- KF-21은 시장 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 때문에 F-50 개발 주장이 힘 얻음
러시아와 중국이 상실하는 중저가 시장을 K-방산은 파고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수 있는가

미국과 동맹이어야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방산 기술도 갖출 수 있다

- 전쟁은 무기 올림픽.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무기로 반격.
-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해 전쟁 끝내면 이들이 중러가 상실한 무기 시장을 차지한다.
- 김씨 정권 붕괴로 북한이 흔들릴 때 대한민국 군 K-방산 앞세워 북진해 안정화 작전해야
-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해야 무기는 잘 팔린다.

K-방산 G4를 만들고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려면 단호한 결정이 필요

- *끝*